



RICON

건설 BRIEF

건 설 브 리 프

산업동향

- 민간부문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과 전문건설업계의 과제
 - 공기업 중심의 수주 확대와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적극 활용

정책동향

-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민간에 맡겨진 지휘권,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적극 의견 개진

시장동향

- 건설시장 여건 악화 우려 : 시장금리 상승과 SOC 예산 감축 영향
 - 한계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대책(전문건설업 포함) 필요

산업동향

민간부문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과 전문건설업계의 과제 -공기업 중심의 수주 확대와 건설신기술·특히 플랫폼 적극 활용-

정대운 선임연구원
(bigluck1@ricon.re.kr)

1. 최근 정부는 민간부문 기술혁신을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 발표

◆ 다양한 유형의 건설신기술 지정방식 신설

- 신기술 지정에 따른 과감한 혜택으로 민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두 가지 신기술 지정 유형을 추가
- **공공수요대응 신기술(공모형)**: 발주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기술테마를 선정하고, 공모를 거쳐 경쟁평가를 통해 신기술 지정여부를 심사하는 지정 방식
- **혁신형 신기술**: 국내 최고 기술 중 세계 1위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화 등을 지원하는 신기술 지정 방식

◆ 공공부문 우수 신기술의 적용 확대

- 신기술 적용에 대한 발주청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신기술관리위원회'를 개편
- 한국도로공사, LH 등 관련 공기업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우수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발주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기술 활용을 독려하여 시행

◆ 공법 평가시 가점부여 및 기술평가 비중 상향

- 우수 공법 선정을 위한 평가 시 현재는 신기술에 대한 혜택이 없고 기술변별력이 크지 않은 실정
- 기술 중심으로 공법 심의방식을 개선하여 신기술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술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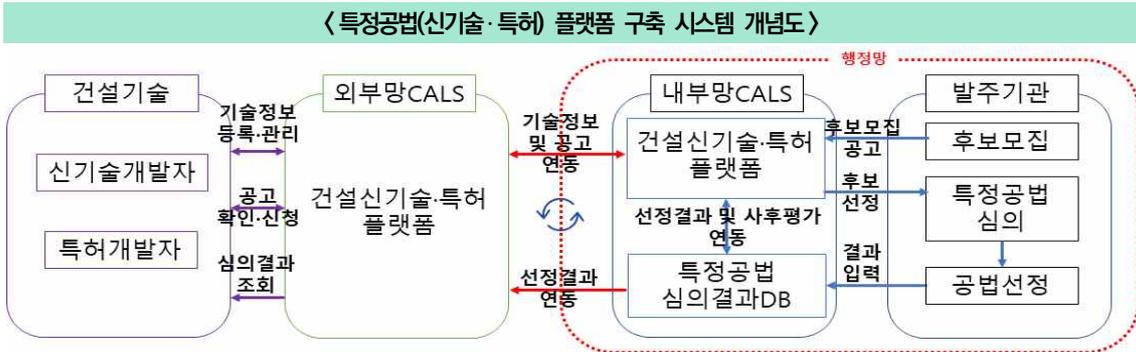
〈우수 공법 선정 평가의 건설신기술 심의방식 개선(안)〉

구 분		기 존	개 선(안)
평가배점	기술평가	60%	80%
	가격평가	40%	20%
가 점		-	3점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9), "민간부문 기술혁신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 우수 기술 선정 시스템 개발로 공법 선정의 투명성 확보

- 우수 공법 활용을 위한 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기술을 선정할 때, 발주기관이 일정한 기준없이 임의로 후보를 선정하여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는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업계의 참여기회 확대와 홍보기회 제공
- 개발자 및 업체가 건설신기술특허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한 기술의 요건을 등록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후보기술(6개)이 선정되는 신기술특허 플랫폼을 개발구축



*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09), “민간부문 기술혁신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2. 건설신기술 관련 전문건설업계의 향후 과제

◆ 공기업을 중심으로 건설신기술을 활용한 수주 확대에 노력

- 공기업의 경우에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공사가 1,700억원, 건당 평균 공사비가 약 5억원 이상의 수준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약 2억원), 교육기관(약 7천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
- 공기업의 경우에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이 마련되어 있고, ‘신기술관리위원회’에도 참여하게 됨으로 공공수요대응 신기술 지정방식 등 새로운 건설신기술 지정방식이 적극 도입될 수 있음

◆ 특허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건설신기술 신청 확대 필요

- 특정공법 심사시 건설신기술에 가점(+3)이 부여되고, 기술평가 배점을 60%에서 80%로 높임으로 현장적용성 등 기술적 검증이 높게 이루어진 건설신기술의 평가가 상향되어 채택 확대가 예상

◆ 건설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적극 활용

- 건설사업정보시스템(www.calspia)에서 “건설신기술특허 플랫폼” 배너링크를 클릭하여 접속 가능
- 회원등록 후 기존 CALS에 입력된 건설신기술 정보와 연계하여 추가정보를 입력 및 관련 파일 첨부
- 특정공법 후보모집 공고를 통해 발주기관별 공고문을 확인 후 입찰금액 및 상세제원을 입력 후 신청

◆ 공공기관의 건설신기술 발주확대를 대비한 ‘건설신기술사용협약제도’의 적극 활용

- 전문공사의 비중이 높은 신기술의 특성과, 소규모 공사의 지역제한 발주가 많은 전문공사의 특성을 고려
- 신기술개발자는 시공 및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기술개발자와 협약을 맺고 기술전수를 받아 입찰 및 시공에 적극 참여

정책동향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추진과제 발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민간에 맡겨진 지휘권,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적극 의견 개진 -

이종광 선임연구위원(jglee@ricon.re.kr)

1.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배경

-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7월 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 개선,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음
- ◆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당부서가 제안한 안건을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1차 심의 및 의결한 후 담당부서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 위원회에서 2차로 심의 및 의결하여 최종 결정함.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이해가 첨예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관이 회의를 주재할 계획
 - 국토교통부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TF를 만들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업계 및 전문가와 소통하는 투트랙 체계를 지원
 - 규제개혁위원회와 별개로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 중임.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과제로 선정

2.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

- ◆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보다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함. 다른 업종 추가 신청 시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대하여 2분의 1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복수면허 등록 시 중복특례는 '1회'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1개 업종'으로 개정하여 회수에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자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물가변동 시행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 외에 지수조정률 방식도 명시

- 건설공사 무사망사고시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게도 적용하고, 건설현장 내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 대한 건설사고 신고의무 시간을 '2시간 내'에서 '사고발생 인지 후 6시간 내'로 조정하여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석공기능사의 경우 토목현장 경력만 인정하고 있으나 건축현장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기준을 개정
- 건설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방지를 위해 기술인력의 상시근무를 건설업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일과 후 영업활동까지 금지하고 있어 건설기술인의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상시 근무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기술인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

◆ 교통 분야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비

- 복합환승센터 실시계획에 여객터미널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시시행 인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
- 250kg 이상의 드론을 조정하기 위한 자격증명서를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제원표를 자율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정

◆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관련 규제의 개선 등

- 기존 대지 면적의 10% 이내의 경미한 건축물 증축 및 대지확장에 대하여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
- 건축물의 최고 높이나 용적률이 경미하게 변경되는 경우 재심의를 생략

3. 시사점

- ◆ 국토교통부가 관행적인 규제개선 행태에서 벗어나 민간위원(전문건설업 관계자 포함)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권한을 준 것은 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렇지만 종래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전문건설업계에서도 적극적 의견 개진이 요구됨
- ◆ 이 번 규제개혁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설기업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다만,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므로 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위원회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시장동향

건설시장 여건 악화 우려 : 시장금리 상승과 SOC 예산 감축 영향

- 한계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 시장대책(전문건설업 포함) 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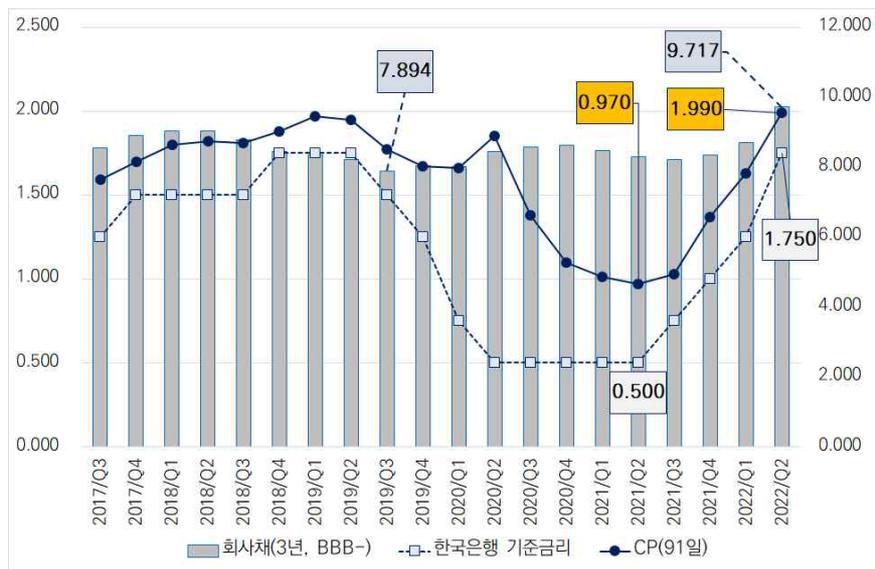
권주안 연구위원(jooankwon@ricon.re.kr)

1.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로 건설투자 위축 불가피

◆ (현황) 기준금리 조정으로 자금조달 금리 상승세 지속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상됐으며 2021년 2분기 0.5%에서 2022년 2분기 1.75%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5분기 동안 총 1.25%p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하여 인플레이션 진정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관찰되기도 함
- 기업 자금조달 금리 중 CP금리는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동일 기간 0.97%에서 1.99%로 상승하여 1.02%p 상승하였음. 단기 자금조달 금리가 5분기 동안 2배로 상승하여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여건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회사채 금리도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폭은 CP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작으나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음

〈기준금리와 기업 자금조달 관련 주요 금리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은행 분석)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설투자는 위축 불가피

- 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내수 영역별 영향을 분석하였음. 건설투자는 기준금리 0.25%p 변동할 경우 1차 연도에 평균 0.07~0.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기준금리가 총 1.25%p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건설투자는 0.35~0.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변동 폭은 크지 않으나 파생되는 건설사 매출 감소폭이 0.70% 정도 예측되고 있음. 이는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져 발주 규모가 감소하는데 기인함
- 건설지출 감소 정도는 건물 유형별로 격차가 있으며 공업용 보다 상업용 건물투자 감소가 큼.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0.2 내외 탄력성을 가지나, 한계기업의 경우 -0.4를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영업 여건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시사점) 보수적 자금운영 및 한계기업 등 저신용업체 대상 한시적 지원책 마련

-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준금리가 지난 5분기 동안 큰 폭으로 조정되어 시장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음.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조정을 지속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자금조달 조건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시장금리 상승은 발주기관의 자금상환 부담을 증대시켜 건설공사 발주 규모 축소로 이어짐
- 한계기업의 금리 변동 민감도가 상당히 커, 영업환경 악화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당분간 적극적인 보수적 자금운영이 강하게 요구되며 자금조달원 다변화도 시도되어야 함. 또한 동시에 건설보증기관의 저신용 조합원 대상 신용보완 등의 추가 지원조치도 선제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선별적 자금지원 방안도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2023년 SOC 예산 감축 등 정부 예산 축소로 업황 악화 우려

◆ (2023년 정부 예산) 639조원으로 전년 8.9% 증가 대비 적은 5.2% 확대로 억제

-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28조원이었으며, 코로나 위기로 인한 위축을 내수시장 진작으로 복원하려는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2023년의 SOC 예산은 올해 대비 18% 감소한 25.1조원으로 축소되어 편성되었음. 토목 중심의 공공 발주 물량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 및 생산비 상승을 겪고 있음. 이번 예산 감소는 원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대폭 감축으로 이해되어야 함. 더욱이 건설산업은 생산체계개편 등 미증유의 불확실성 여건에 놓여 있어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건설관련 협회 차원의 대응전략 강구 필요

- 코로나 위기 동안 발생한 원가 상승분이 제대로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동시에 건설관련 협회 차원에서는 SOC 예산의 선택적 증액 여건을 조성하는 전략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함

3. 전문건설시장 여건 악화의 선제적 대비 필요

◆ 금리 상승 등 경기 침체와 예산 감액으로 전문건설시장 여건 악화 우려

- 최근 건설시장 관련 주요 변수들의 변동은 건설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음. 한국은행이 추정한 금리 탄력성은 크지 않더라도 금리 상승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진전될 경우 추가 건설투자 위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존재함. 또한 정부 SOC 예산 감축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건설활동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음
 - 공급 확대 기초로 긍정적인 매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었던 주택시장은 수요 위축으로 인한 공급 여건 악화로 안정적 매출 기회로 이어지기 못하고 있어 토목, 건축 등 전문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적 영업 여건 악화가 우려됨
- 경기 침체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도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예산도 감액되는 등 악재가 발생하고 있음. 단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 경기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단기 및 중장기 경기변동 대응에 대한 관심과 노력 필요

- 금리 상승에 대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보증기관(전문건설공제조합 등) 중심의 기존 보증상품 보완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정부 SOC 예산 감축에 대해선 건설관련 협회 차원의 접근과 선별적 예산 증액 등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원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하는 장치 마련 등의 다각적, 실천적 시도가 병행되어야 함
- 주택시장 침체는 공공부문 발주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민간부문 위축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 기회를 조성할 수 있음. 따라서 주거와 관련한 부분적 개량 등 다양한 정비 관련 수요의 잠재적 성장성에 대응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함
- 이러한 상황은 주로 원도급을 수행하는 종합건설사업자 뿐 아니라, 하도급 또는 지역의 소규모 원도급 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도 중요한 시장 측면의 영향 요인이므로, 전문건설업계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임